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12.18.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53호
----------	-------

제출연월일 : 2018. 12. 18.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 나. 타 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산정기준 판단 근거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안 별표19)
- 나. 축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세부 입지기준을 신설(안 별표24)
- 다. 관련법령 명칭 변경 반영(안 제46조제2호, 안 제47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3) 규제심사 : 원안가결(붙임2 참조)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18.11.20. ~ 2018.12.14.
 - (나) 결과: 붙임3 참조
 -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붙임4 참조)
 - (6) 충청남도소관실과: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도시재생과장	홍 재 창
	도시계획팀장	이 현 근
	담 당 자	박 평 운 (746-6212)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조례 제30조제19호 관련)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방하천은 논산천을 말한다. 같은 규칙 단서 조항에 따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산정기준은 주택부지와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공가 및 폐가를 제외 하며,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한다.

1. ~ 10.(생략)

[별표 24]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구 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용어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9를 준용한다. 2.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 중에서 2차선 이상 도로를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의 지적경계선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3. “발전시설”이란 태양광발전시설을 말한다. 4.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축사”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 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축사를 말하며, 야적장은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는 시설을 말한다. 5.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발전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은 주택 1호당 30m를 누적한 거리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요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휼스 또는 수목 등)를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숙박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구 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축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2.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등 방지를 위하여 기 인·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2. -----, 「물환경보전법」-----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	② ----- ----- ----- ----- ----- -----.

<p>다.</p> <p>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p> <p>나.·다. (생략)</p> <p>2. (생략)</p>	<p>1. ----- ----- ----- ---</p> <p>가.-----, 「물환경보전법」----- ----- ----- -----</p> <p>나.·다.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illegible]

[별표 24]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구 분	현행	개정안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용어정의	<p>1. (생략) <u><신설></u></p> <p>2. “발전시설”이란 태양광발전 시설을 말한다.</p> <p>3.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을 말하며, 야적장은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는 시설을 말한다.</p> <p>4.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 중에서 2차선 이상 도로를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의 지적 경계선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u>축사</u>”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u>축사</u>를 말하며, 야적장은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는 시설을 말한다.</p> <p>5.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p>
발전시설	<p>1. <u>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 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1. <u>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은 주택 1호당 30m를 누적한 거리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u> ----- ----- -----.</p>

구 분	현행	개정안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발전시설	<p>2.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신설></p> <p>3.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휼스 또는 수목 등)를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2. <u>주요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p> <p>3. <u>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숙박시설	<p>1. (생략)</p> <p>2.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구 분	현행	개정안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1. (생략) 2. (생략) 3.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축사	<u><신설></u>	1. <u>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u> 2. <u>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등 방지를 위하여 기 인·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u>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현행과 같음)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 6.30.시행)

충청남도내 시·군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기준

시군	거리기준(직선거리)	비고
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5호 이상 : 300m 5호 미만 : 100m 	
공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도로 및 관광지 : 200m 10호 이상 : 200m 	
보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도로 : 200m 10호 이상 : 200m / 10호 미만 : 가구당 20m(최소50m) 	
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 : 200m 지방도 및 시도 : 100m 10호 이상 : 200m 10호 미만 : 주택당 20m(누적) ※최소 50m이상 	
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및 관광지 : 200m 10호 이상 : 200m 10호 미만 : 주택당 20m ※최소 50m이상 	
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호 이상 : 300m 	
계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도로 및 관광지 : 200m 10호 이상 : 200m 10호 미만 : 가구당 20m(최소 50m) 	
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도로 및 관광지 : 200m 10호 이상 : 500m 	

시군	거리기준(직선거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호 미만 : 가구당 50m 	
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도로 : 200m ◦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 : 300미터 ◦ 주거밀집지역 10호 미만 5호 이상 : 200미터 ◦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 : 100미터 이상 ◦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 200미터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도로 : 200m ◦ 10호 이상 : 300m / 5~10호 : 200m ◦ 관광지 : 500m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도로 : 250m ◦ 해안선 : 250m ◦ 10호 이상 : 400m ◦ 5~10호 : 200m ◦ 5호 미만 : 100m 	
청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호 이상 : 500m ◦ 5호 미만 : 200m 	
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 200m ◦ 10호 이상 : 200m ◦ 10호 미만 : 가구당 20m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호 이상 : 500m ◦ 10호 미만 : 200m ◦ 주요도로 : 100m 	
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도로 : 200미터 ◦ 주거밀집지역 : 400m / 5호 미만인 경우 100미터 ◦ 관광지, 관광단지, 해수욕장, 어항, 문화재 : 300미터 	

□ 규제심사 결과

의안 번호	의안명	의결 주문	심의 결과	의결 유형	발의부서
제2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신설규제 심사 요청의 건	규제 신설	가결	10명 원안가결 1명 수정가결	도시재생과

□ 기타(수정가결) 제출의견

제2회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검토의견

위 원	의 건	비 고
김	<p>『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신설 규제 심시안』을 보면 현재 충청남도내 시군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기준이 천안, 금산, 서천, 예산, 태안은 가구수 5호 미만일 경우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에서 100 m 이상, 청양은 200 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입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 아산, 서산, 계룡, 당진도 1가구라도 최소 이격거리가 50 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p> <p>따라서 논산의 경우는 1안) 10호 미만의 경우 기본 이격거리 50 m에 1가구당 25 m씩 누적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2안) 5호~9호 : 200 m 이상, 5호 미만 : 100m 이상의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p> <p>최소 한 가구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도내 타시군의 경우와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가. 관계부서 협의(원스톱허가과)

① 의견 : 주요도로의 범위에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를 추가 요청

⇒ 답변 :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시 진입도로의 확보와 관련하여 규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② 의견 :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발 행위허가 대상인 경우의 허가기준을 정해줄 것을 요청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나. 전자공청회(반대 2, 기타 1)

① 의견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반대(2명)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관련기준을 정비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운영 취지임

② 의견 : 논산시 도시계획 개정으로 자연마을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램(1명)

⇒ 답변 : 비시가화지역의 주거환경 보호 및 난개발 방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다. 정부입법지원센터(반대 1)

- ① 의견 : 태양광발전시설은 친환경 에너지원이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대체에너지원에 해당함에 따라 민원발생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논산시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

⇒ 답변 : 국가의 에너지수급정책과 국토이용 관리정책의 부조화로 인하여 비시가화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등의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개발행위허가 제도 보완의 일환으로 추진함

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반대 8)

- ① 의견 : 타 지역에 비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제가 심한 것으로 판단(배○○)

⇒ 답변 : 주거환경 보호,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정, 등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정비가 필요함.

- ② 의견 : 논산시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규제가 심한 것으로 판단(정○○)

⇒ 답변 : 주거환경 보호,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정, 등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정비가 필요함.

- ③ 의견 : 논산시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박○○)

⇒ 답변 :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입지를 제한하지 않음.

- ④ 의견 : 공장, 상가, 축사, 태양광발전시설 등 규제가 심한 것으로 판단(김○○)

⇒ 답변 : 주거환경 보호,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정, 등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정비가 필요함.

⑤ 의견 : 타 지역에 비해 태양광 발전규제가 심함(김○○)

⇒ 답변 : 주거환경 보호,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정, 등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정비가 필요함.

⑥ 의견 :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맞지 않음(이○○)

⇒ 답변 : 주거환경 보호,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정, 등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정비가 필요함.

⑦ 의견 : 규제로 인해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매매가 어려움(이○○)

⇒ 답변 : 주거환경 보호,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정, 등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정비가 필요함.

⑧ 의견 : 발전시설 규제를 모두 완화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도 허용할 것을 요청(박○○)

⇒ 답변 : 보전관리지역은 임상이 양호한 산지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거나 경사도가 강한 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산사태 또는 환경파괴를 예방하여 얻는 공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입지를 제한함이 타당함.

마. 서면의견(찬성 1명, 반대 700명)

[찬 성 (발전시설 : 1명 / 축사 1명)]

① 의견 : 10호 이상 자연마을 산정기준 명확화, 축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관련 세부 입지기준 신설, 관련법령 명칭 변경 부분이 타당함(홍○○ : 찬성)

⇒ 답변 : 비사기화지역의 주거환경 보호 및 난개발 방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반 대 (발전시설 : 44명 / 축사 693명)]

① 의견 : 농지법에서 우량농지에서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한은 불가함. 자연재해 등으로 소멸시 재축허용이 필요함. 연쇄적 잠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음. (곽○○ : 축사 반대1)

⇒ 답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한하여 우량농지에서의 축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 노후축사의 유지 보수를 위한 대수선과 함께 자연재해에 의한 멸실에 따라 시행하는 재축은 허용하는 사항임. 입법예고시 제출된 개축 허용 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② 의견 : 태양광은 기존 300미터에서 200미터로 완화해야 함.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지붕공간을 이용하는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삭제가 필요함. (곽○○ 외 2인 : 태양광 반대3)

⇒ 답변 :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 기존 거리제한의 기준과 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음.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입지를 제한하지 않음.

③ 의견 : 농지법에서 우량농지에서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한은 불가함. 자연재해 등으로 소멸시 재축허용이 필요함. 연쇄적 잠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음. (김○○ : 축사 반대1)

⇒ 답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한하여 우량농지에서의 축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 노후축사의 유지 보수를 위한 대수선과 함께 자연재해에 의한 멸실에 따라 시행하는 재축은 허용하는 사항임. 입법예고시 제출된 개축 허용 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④ 의견 : 건축물의 노후화, 환경적 요인에 따른 증개축이 필요함. 기존 주거 지역 내에 축산인이 마을주민을 위해 축사이전 절차상 현대화 시설이 가능한 우량농지로 이동하여 축산을 영위하는데 대한 인권침해가 있음. 후계축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며, 축산농가의 생존권에 위협을 초래함. 축사 노후화, 경영상황, 화재, 자연재해 등에 따른 증개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증개축없이 축산자체가 불가능함. (논산시 축산단체 연합회 회원 김○○ 외 444명 : 축사 반대 445명)

⇒ 답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한하여 우량농지에서의 축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 노후축사의 유지 보수를 위한 대수선과 함께 자연재해에 의한 멸실에 따라 시행하는 재축은 허용하는 사항임. 입법예고시 제출된 개축 허용 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 ⑤ 의견 : 건축물의 노후화, 환경적 요인에 따른 증개축이 필요함. 기존 주거지역 내에 축산인이 마을주민을 위해 축사이전 절차상 현대화 시설이 가능한 우량농지로 이동하여 축산을 영위하는데 대한 인권침해가 있음. 후계 축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며, 축산농가의 생존권에 위협을 초래함. 축사 노후화, 경영상황, 화재, 자연재해 등에 따른 증개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증개축없이 축산자체가 불가능함. (논산시 대한양계협회 논산시 육계지부 회원 정○○ 외 58명 : 축사 반대 59)

⇒ 답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한하여 우량농지에서의 축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 노후축사의 유지 보수를 위한 대수선과 함께 자연재해에 의한 멸실에 따라 시행하는 재축은 허용하는 사항임. 입법예고시 제출된 개축 허용 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 ⑥ 의견 : 농지법에서 우량농지에서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한은 불가함. 자연재해 등으로 소멸시 재축허용이 필요함. 연쇄적 잠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음. 증개축 허용이 필요함. (도○○ : 축사 반대1)

⇒ 답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한하여 우량농지에서의 축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 노후축사의 유지 보수를 위한 대수선과 함께 자연재해에 의한 멸실에 따라 시행하는 재축은 허용하는 사항임. 입법예고시 제출된 개축 허용 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⑦ 의견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지역 먹거리를 차단하는 사항으로, 거리 제한은 구체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주민동의가 있는 경우 허용이 필요하며 가까운 거리는 100미터 5호, 200미터 10호 이내로 조정할 것을 제안함
(박○○ : 태양광 반대명)

⇒ 답변 :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 기존 거리제한의 기준과 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음.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입지를 제한하지 않음.

⑧ 의견 : 우량농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해줄 것, 노후화로 인한 개축사유 발생시 축산인은 어려움이 발생함(유○○ : 축사 반대명)

⇒ 답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서 일단의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지정리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에 적합하며 농업생산성이 우수한 농지를 말함(예 : 대구형 경지정리사업 지구). 기인하기된 시설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이 가능하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개축 허용 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⑨ 의견 : 1호당 누적거리를 계산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제정을 반대함. 주요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 발전시설의 입지 불가의 사유, 환경피해의 근거, 산발적으로 조성된 주택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바라보는 미관기준에 관한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반대함.
(윤○○ : 태양광 반대)

⇒ 답변 :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 기존 거리제한의 기준과 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음.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이격거리 등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해당이 없음

⑩ 의견 : 주택부지와 주택부지로 할 경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10호 산정시 불법건축물의 산정문제가 발생하므로 종전 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로 함이 타당함. 주택 1호당 30미터 기준 적용시 해석상의 혼선으로 다수의 민원발생이 예상됨.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함 (윤○○ : 태양광 반대1)

⇒ 답변 : 불법건축물인 경우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물리적인 부지 경계에 해당하는 경우 담장이나 울타리를 경계선으로 함. 물리적인 부지 경계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벽면을 기준으로 함.

⑪ 의견 :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산정기준은 주택외벽과 주택외벽의 직선거리 50미터로 산정해줄 것을 제안,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거리제한을 200미터로 완화, 1호당 30미터 누적거리 제한 폐지, 보전관리지역내 발전시설 허용, 제한 거리내 주민동의 100%시 허가가능토록 완화할 것을 제안하며 발전 사업이 지역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됨(이○○ : 태양광 반대1명)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및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9에 따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을 의미 하며, 기존 운영상의 미비점을 법령제정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임. 거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비시기화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한이 필요함. 제한거리내 주민동의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에 따른 과도한 서류 및 요건을 부여하는 사항임에 따라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⑫ 의견 : 농지법에서 우량농지에서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한은 불가함. 자연재해 등으로 소멸시 재축허용이 필요함. 발전시설은 국가 장려사업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함. (이○○ 외 28인 : 태양광 및 축사 반대 29)

⇒ 답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한하여 우량농지에서의 축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 노후축사의 유지

보수를 위한 대수선과 함께 자연재해에 의한 멸실에 따라 시행하는 재축은 허용하는 사항임.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세부 입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운영 취지임. 입법 예고시 제출된 개축 허용 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 ⑬ 의견 : 건축물의 노후화, 환경적 요인에 따른 증개축이 필요함. 기존 주거 지역 내에 축산인이 마을주민을 위해 축사이전 절차상 현대화 시설이 가능한 우량농지로 이동하여 축산을 영위하는데 대한 인권침해가 있음. 후계축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며, 축산 농가의 생존권에 위협을 초래함. 축사 노후화, 경영상황, 화재, 자연재해 등에 따른 증개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증개축없이 축산자체가 불가능 함. (전국한우협회 논산시지부 회원 유○○ 외 146명 : 축사 반대 147명)

⇒ 답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서 일단의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지정리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에 적합하며 농업생산성이 우수한 농지를 말함(예 :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지구). 기인허가된 시설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이 가능하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개축 허용 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 ⑭ 의견 : 농지법에서 우량농지에서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한은 불가함. 자연재해 등으로 소멸시 재축허용이 필요함. 발전시설은 국가 장려사업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함. (정○○ 외 2인 : 축사 및 발전 시설 반대3)

⇒ 답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한하여 우량농지에서의 축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 노후축사의 유지 보수를 위한 대수선과 함께 자연재해에 의한 멸실에 따라 시행하는 재축은 허용하는 사항임.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세부 입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운영 취지임. 입법예고시 제출된 개축 허용 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⑮ 의견 : 농지법에서 우량농지에서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한은 불가함. 자연재해 등으로 소멸시 재축허용이 필요함. 발전시설은 국가 장려사업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함. (황○○ 외 4인 : 축사 및 발전 시설 반대5)

⇒ 답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한하여 우량농지에서의 축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 노후축사의 유지 보수를 위한 대수선과 함께 자연재해에 의한 멸실에 따라 시행하는 재축은 허용하는 사항임.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세부 입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운영 취지임. 입법예고시 제출된 개축 허용 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16 의견 : 개축 불허는 부당함. 건축물 노화시 한 개씩 교체도 어려움. 축사인이 하우스를 하게 되면 하우스 농가에도 영향을 미침 (양○○ : 축사 반대1)

⇒ 답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한하여 우량농지에서의 축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 노후축사의 유지 보수를 위한 대수선을 허용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개축 허용 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1. 관계부서 협의 근거자료

구 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용어정의	<p>2.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중에서 2차선 이상 도로를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의 지적경계선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p> <p>3. “발전시설”이란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을 말한다.</p>								
발전시설	<p>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 태양광 발전설비 기준(건축설비)</p>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태양광 발전설비(건축설비)</th></tr> <tr> <td>면적</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cm이상 후퇴하여 설치 * 태양광 발전설비 탈락 및 유지관리 공간 등 고려 </td></tr> <tr> <td>높이</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등 등 바닥면에서 5m이내 </td></tr> <tr> <td>안전</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검토 확인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 확보 </td></tr> </table>	구분	태양광 발전설비(건축설비)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cm이상 후퇴하여 설치 * 태양광 발전설비 탈락 및 유지관리 공간 등 고려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등 등 바닥면에서 5m이내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검토 확인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 확보
구분	태양광 발전설비(건축설비)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cm이상 후퇴하여 설치 * 태양광 발전설비 탈락 및 유지관리 공간 등 고려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등 등 바닥면에서 5m이내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검토 확인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 확보 								

2. 전자공청회 근거자료(반대2, 찬성1)

전체 (2)	찬성 (0)	반대 (2)	기타 (1)	추천수 (0)
<div>h (2018-11-22 09:12)</div> <div>반대 비공개 댓글입니다</div>				
<div>a (2018-11-20 14:56)</div> <div>반대 충청남도 논산시장 돈으로 하세요,,</div> <div>댓글(0) 추천 0 반대 0</div>				
<div>ss (2018-11-20 10:47)</div> <div>기타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자연마을 형성에 도움이되길 바랍니다</div> <div>댓글(0) 추천 0 반대 0</div>				

3. 정부입법지원센터 근거자료(반대1)

2018. 11. 20. ~ 2018. 12. 14.
 전체
 전체
 10건
 ☐ 국민법제관 의견만 보기

접수순

☐ 전체선택

 전체 의견수 (1)건 1~1000건

☐ 네이버
 hanmail.net 2018. 12. 6. 09:37 제출 (오프라인등록)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반대

-태양광발전시설은 공해 없는 차세대에너지로서, 현 국가 시책으로 각광받는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정부가 탈원전을 표방해가는 현 시점에서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은 태양광발전시설뿐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 한다고 하여 태양광 발전을 조례로 막는 것은 국가 시책에도 어긋날 뿐더러 논산시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논산시와 시민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셔서 조례안 개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4.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근거자료(반대 8)

입법예고			
입법예고를 자치단체별로 편리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홈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상세			
공고(공포)명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충청	부서	영광도시국 도시재생과
공고(공포)번호	논산시 공고 제2018-1667호	공고(공포)일자	2018년 11월 29일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43조 및 ?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규제명합본서(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20181101).hwp		
첨부파일2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181101).hwp		

국민의 의견		
작성일자	의견	찬성반대
백**	타지역에 비하면 특히 논산시 태안항 발전 사업에 대하여 기대가 제일 심한것 같습니다 많은바라기 바랍니다	반대
장**	논산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써 태안항을 위해서 논의 규제 가산하여 못한다 고하니 누구를 위한 정책 인가	반대
박**	태안항 발전사업이 인허가 해줄고 관공에 저장이 인허가 상설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안항 사업을 옮겨야 해주기 바랍니다. 한번 좀바라다 태안항사업이 인허가 해줄고 관공이 저장이 인허가 된것입니다. 아니면 규제보다는 소득증대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심**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 말할 심해다. 풍광도 못하게, 살기도 못하게, 육사로 못하게, 태안항발전사업도 못하게, 뭐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나라에서 뭐해주나요, 겨울... 논산이 살아요...	반대
장**	타지역에 비해 논산시 태안항발전은 규제가 심하고 태안항발전사업부지의 주변환경사실을 참조하지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조례개정도 비추어 맞지않는다...	반대
이**	현실에 맞지않는 행정으로 거대한 돈들 규제를 강행하는것은 논산시민을 생각지않고 민회에 시달린다고 규제를 강행시키는 행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잘못된 생각 아무행위 바라시는 시. 입법이 되시길 투손으로 바라옵니다. 의지사람들이 보는 논산시는 입으로 담지못할 이미지를 합니다. 시민의 자존심은 ...	반대
이**	농사소출이 적은 학포의 농토를 발전사업 부지로 해매하고싶어도 당선을 규제로 할수없어 굶어 죽은단 말입니다. A. C.를바	반대
박**	지금껏 규제된 발전사업 모두 풀고 보전관리지역으로 묶던것도 역물한데 보전관리지역도 발전사업할수 있게 규제풀어서 우리시민도 학교설치 사업등 직원을 일만케하시라고 입법을 위해 시장 잘 살펴주세요	반대

5. 서면의견 근거자료(찬성 1명, 반대 700명)

- 성명(단체명) : 홍○○
- 주 소 : 논산시 강경읍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	성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논산시 공고 제2018-1667호)	찬	성	입법 예고된 내용 대로 일부개정하는 개정의견이 타당함. 1) 10호 이상 자연마을 산정기준 판단근거 명확화, 2) 축사 및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행위허가 관련 세부 입지 기준신설, 3) 관련법령 명칭 변경부분 반영 등 타당하고 적절함.	

- 성명(단체명) : 곽○○
- 주 소 : 논산시 연산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곽

○ 주 소 : 논산

○ 연 락 처 : 010-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축사 1항		○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있는 우량농지에서 농업생산성이 매우양호한데 농지법에서 양축행위도 영농행위로 간주하는데 농업인의 자의적인 영농행위를 논산시장과 논산시의회는 조례규정으로 제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규제과잉금지원칙위반 다만규정도 강력반대 기존건축물이 자연재해 화재등으로 소멸시에 재축허용 되어야 합니다.	
축사 2항		○	연쇄적잠식이란 용어자체가 마치 영농행위가 농지를 훼손하는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 축사1항에 충족시에는 본 조항 필요없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하여는 미래에는 규모화가 필수적이므로 현행규정에 맞는다면 증축,개축은 허용 되어야 합니다.	

- 성명(단체명) : 광○○ 외 2인
- 주 소 : 논산시 연산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광

○ 주 소 : 논산

○ 연 락 처 : 010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발전시설 1항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설치를 왜 규제 하는지 기존300미터를 완화하여 200미터로 해야됩니다.	
발전시설 2항			삭제 또는 100미터 이내로	
발전시설 3항			오염원이 발생하지않는 신생에너지 진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지붕공간을 이용하는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당연히 삭제 되어야 합니다.	

- 성명(단체명) : 김○○
- 주 소 : 논산시 연산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김

○ 주 소 : 논산

○ 연 락 처 : 010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축사 1항		○	농지법에서 양축행위도 농사행위로 인정하는데 농업인의 농사 행위를 논산시 조례규정으로 제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축사 2항		○	연쇄적잠식 용어를 사용하는것이 마치 영농행위를하는 농민들을 농지를 훼손하는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성명(단체명) : 논산시 축산단체 연합회
- 주 소 : 논산시 생피길

논산시 축산단체 연합회

발 신 축산단체 연합회
수 신 논 산 시 장
참 조 도시재생과장

선결		종 2차	지시	
접수	일자	2018.12.14	결재	
	번호	48429.		
처리과	도시재생과	공람	과장	3/10
담당자	박광호		팀장	이현근

제 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논산시 축산 단체 연합회



- 성명(단체명) : 대한양계협회 논산시 육계지부
- 주 소 : 논산시 생피길

대한양계협회논산시육계지부

문서번호 2018 -60
시행일자 2018. 12 . 14

수 신 : 논산시장
참 조 : 도시재생과장

선결		홍지현	지시	
접수	일자 시간	2018.12.14	결재 · 공람	
	번호	48141		
처 리 과	도시재생과		과장	김영환
담당자	박영환		협장	이현근

제 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대한양계협회논산시육계지부장



- 성명(단체명) : 도○○
- 주 소 : 논산시 연산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도

○ 주 소 : 논산

○ 연 락 처 : 010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축사 1항		○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있는 우량농지에서 농업생산성이 매우양호한데 농지법에서 양축행위도 영농행위로 간주하는데 농업인의 자의적인 영농행위를 논산시장과 논산시의회는 조례규정으로 제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규제과잉금지원칙위반	
축사 2항		○	다만규정도 강력반대 기존건축물이 자연재해 화재등으로 소멸시에 재축허용 되어야 합니다. 연쇄적잠식이란 용어자체가 마치 영농행위가 농지를 훼손하는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 축사1항에 충족시에는 본 조항 필요없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하여는 미래에는 규모화가 필수적이므로 현행규정에 맞는다면 증축.개축은 허용 되어야 합니다.	

○ 성명(단체명) : 유○○

○ 주 소 : 논산시 성동면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축사 1번항		○	<p>◎ 축사 1번항</p> <p>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라함은 명확한 지목이나 농지법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지 않은 사항으로 민원인과 행정관청 간 혼선이 발생하고 또한 농업도시에서 영농기반을 원천봉쇄하는 정책으로 후계축산인, 창업축산인,귀농축산인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축산인의 한사람으 로 이번조례 안발표되 고 환경과 거리제한 규정으로 앞으로 축산인은 논산시를 떠나야하 는지 포기를 해야하는 지 답답합니 다</p>
축사 2번항			<p>◎ 축사 2번항</p> <p>기인'허가된우량농지내에 증' 개축을허용하지 않으면 노후화로 인하여 개축이 발생하면 앞으로 축산인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p>	

- 성명(단체명) : 윤○○
- 주 소 : 논산시 취암동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윤
- 주 소 : 논산
- 연 락 처 : 010~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	성		
논산시공고 제2018-1667호로 자치 법규안입법안 입법예고된 발전 시설에대한 규제중 1. 10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 3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것과 10호 미만은 주택 1호당 30m를 누적한 거리안에 입지하지 아니할것에 대하여		반대	현행대로의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300m이격조건도 조례제정의 정당한 근거나 규정이 없이 논산시의 행정 편의상 규정한 조항으로서 타당하지 않음에도 또다시 주거시설 1 가구당 300m를 누적계산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 하는 것은 확실한 피해 사례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피해 근거를 명시 하지 않는한 제정 되어서는 안되는 조항임	
주요도로로부터 200m안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한 것에 대하여		반대	주요도로로부터 200m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입지해서는 안되는 타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 또한 허가시 일반 적으로 적용하는 환경피해의 근거가 명확히 무엇인지 ? 집단 비닐 하우스나 규격화 되지않고 산발적으로조성된 집마울 은 미관상 아무상관이 없고 유독 태양광 발전 시설에 한하여만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규제하는 근거가 확실해야 할것이므로 근거없는 조례제정은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수 없으므로 반대함	

- 성명(단체명) : 윤○○
- 주 소 : 논산시 취암동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윤
- 주 소 : 논산
- 연 락 처 : 010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단서조항에 따른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산정기준은 주택부지와 주택부지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반대	주택부지와 주택부지로 할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 위치한 농지, 임야 등 지적선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10호 산정범위로 불법건축물의 정당화, 하여 종전 실제 거주주택과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건물결선으로)과 주택부지로 하여야 타당함.	
[별표 24]발전시설 1호. 10호 미만은 주택1호당 30미터를 누적인 거리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반대	주택 1호당 30미터 기준적용의 혼선으로 많은 민원유발(별적다툼)등 삭제 해야 타당함.	
[별표 24]발전시설 2호. 주요도로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반대	현재 발전시설 경계로부터 3미터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 확보하고 경관수목 등 식재 공작물 (발전시설)차폐하고 있는바, 삭제 해야 타당함. 최근 기존에 존재하던 에너지원들의 환경오염이나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요인으로 인해 미세먼지,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인해 정부에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새로이 내면서 환경문제와 신에너지재생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선두로 내걸린 것이 바로 태양광입니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사업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여 논산 시에서도 적극 규제완화 하여야 합니다.	

○ 성명(단체명) : 이○○

○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발전시설		반대	<p>1)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산정기준은 주택 외벽과 주택외벽의 직선거리 50m로 산정.</p> <p>2) 10호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거리제한을 축소하여 가시거리 200m로 완화.</p> <p>3) 1호당 30미터 누적거리제한은 폐지.</p> <p>4) 주요거리 제안폐지</p> <p>5) 보전관리지역에서도 발전시설이 가능도록 규제완화.</p> <p>6) 거리제한안에 있는 주민동의를 100% 받을시 허가를 가능도록 규제완화</p> <p>- 반대이유: 1)태양광발전시설은 혐오시설, 공해시설도 아닌 것을 규제하는 자체가 잘못 판단된 행정임.</p> <p>2) 발전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에서 공사 준공시까지의 공정에서 논산시민도 많은 혜택과 지역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됨.</p> <p>※ 공무원 편의주의를 벗어나 시민편익을 생각하는 정책을 하었으면 좋겠습니다.</p>	

○ 성명(단체명) : 이○○ 외 28인

○ 주 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이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p>1.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개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p> <p>2.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등방지를 위하여 기 인·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p>		○	<p>1.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라 함은 명확한 지목이나 농지법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과 민원인 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농업도시인 논산시에서 영농기반을 붕쇄 하려면 후계축산인 및 귀농 축산인을 포함한 축산인 삶의 향 또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p> <p>2. 기 인·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축사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축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개축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해야 하는 건지 제시해주시고 몰아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공생 또는 상생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p> <p>3. 발전시설은 국가장려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발전시설 설치 여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p>	<p>•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 이번 조례안 발표되고 환경과 거리 제한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 논산시를 떠나야 하는 축산을 포기해야 하는지 축산을 포기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p>

- 성명(단체명) : 전국한우협회 논산시지부
- 주 소 : 논산시 해월로

전 국 한 우 협 회

우:32950

문서번호 : 논산 제2018 - 53호

시행일자 : 2018. 12. 13.

(경 유)

수 신 : 논산시 도시재생과

참 조 :

선 결	공자랑	지 시	
접 수	일자 12.13 번호 4849K	결 재	
처리과	도시재생과	공 함	
담당자	박정원	과장	전영
		팀장	이현수

제 목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논산시 공고 제2018-1667호 와 관련입니다.
2. 관련호에 의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사) 전국한우협회 논산시지부장



- 성명(단체명) : 정○○ 외 2인
- 주 소 : 논산시 연산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정○○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p>1.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개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p> <p>2.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등방지를 위하여 기 인·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p>		○	<p>1.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라 함은 명확한 지목이나 농지법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과 민원인 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농업도시인 논산시에서 영농기반을 붕괴 하려면 후계축산인 및 귀농 축산인을 포함한 축산인 삶의 방향 또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p> <p>2. 기 인·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축사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축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개축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해야 하는 건지 제시해주시고 몰아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공생 또는 상생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p> <p>3. 발전시설은 국가장려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발전시설 설치 여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p>	<p>•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 이번 조례안이 발표되고 환경과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 논산시를 떠나야 하는 축산을 포기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p>

- 성명(단체명) : 황○○ 외 4인
○ 주 소 : 논산시 상월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한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1.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개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1.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라 함은 명확한 지목이나 농지법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과 민원인 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농업도시인 논산시에서 영농기반을 붕괴 하려면 후계축산인 및 귀농 축산인을 포함한 축산인 삶의 향 또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 이번 조례안 발표되고 환경과 거리
2.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등방지를 위하여 기 인·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2. 기 인·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축사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축의 필요로 논산시를 성이 발생하면 개축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해야 하는 건지 제시해주지 축산을 포시고 몰아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공생 또는 상생 방법을 모색했는지 답답합니다.	하는지 답답합니다.
			3. 발전시설은 국가장려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발전시설 설치 여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성명(단체명) : 양○○

○ 주 소 : 논산시 성동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양

○ 주 소 : 논산시

○ 연 락 처 : 010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축사)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개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신설) 2.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등 방지를 위하여 기 인·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개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맞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화 됨으로써 관계식 같아야 되는 부분 맞고 안됩니다. 축산 농가도 어떠한 농민입니다. 그세들이 들어와 영생까지 살아 보려고 하는데 노화 됨으로써 객관상으로도 흥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할수없어서 하우스를 하게되면	

하우스하는 사람들 또한 살만
- 3 경제 적 어려움이 더 악화될거라
생각합니다.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 당 없 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도시재생과장 홍 재 창